

“오랜 숙원” 中企, 정치권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잔걸음

중기중앙회, 국힘 정책위와 토론회 조정협의 의무제와 결합 노력 필요
 김희장 “제값 받아야 혁신역량 성장”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은 공동으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송실대 송창석 교수는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기존의 조정협의 의무제와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앞으로 더욱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빈번해질 전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기문 회장(왼쪽 3번째)이 성일종 의원(왼쪽 4번째)에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망이어서 이참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을’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일감을 받는 하청 중소기업들이 원청 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을’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해 대기업 등에 납품대금을 올려달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별도의 요청 없이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이는 위탁기업(원청)과 수탁기업(하청)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의무’가 발생한다.

조정협의 의무제가 불가피한 손실에 대한 사후 지원 성격이 짙다면, 연동제

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위탁·수탁기업이 분담하는 등 ‘손실보상’ 성격이 강하다.

송창석 교수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협상력 균형’이 핵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 오르거나 내릴 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서 “계약 후 추가 협상도 허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납품단가 연동비율은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잔걸음을 걷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한 국민의힘 김정재·한무경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 촉진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 발급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 종류·가격 기재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 포함 ▲주요 원자재 가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시 약정서에 정한대로 납품대금 조정 지

급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 약정서에 기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정 거래위해 표준 약정서 작성·사용 권장 ▲원자재 기준 가격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시 위탁기업이 추가 발생 비용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 ▲중기부 장관이 추가 비용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스타트업 430곳 기술개발 돕는다

1년간 최대 1.2억 R&D 비용 지원
 전년 184개사 대비 지원 2배 늘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첫걸음) 과제에 스타트업 430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전년(184개사 지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창업 7년 이하 이면서 최근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디딤돌 사업은 중기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한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

한다. R&D 초보 스타트업에 1년간 최대 1억2000만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뽑힌 430개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업이 절반 이상(58.8%)을 차지한다.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59개사(13.7%),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46개사(10.7%) 순이다.

권역별 특징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정보통신(41.1%), 전기·전자(15.4%) 분야 순으로 선정됐다. 업력은 1년에서 3년 미만 기업이 121개사(47.8%)로 가장 많았다.

부·울·경의 경우 기계·소재(32.2%), 바이오·의료(22.0%)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

년에서 3년 미만 기업(55.9%)이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기계·소재(28.3%), 바이오·의료(19.6%) 분야 순이었다. 영남권과 호남권은 기계·소재 분야, 기타권역은 정보통신 분야의 선정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벤처·스타트업의 지난해 고용 증가율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벤처·스타트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적극행정으로 中企 규제애로 해소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칭)’를 통한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공공기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중진공은 17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2년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중진공이 적극행정으로 발굴한 8건의 규제사무를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원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진공이 직접 투자하는 전환사채 및 우선주 인수기업 대상 투자자(중진공)사 전동의 사항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중진공이 직접 해결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향을 심

의하는 기구다. 과거엔 규제애로를 겪는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했다면 지금은 규제를 만든 중진공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규제는 곧바로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정부 부처의 규제입증책임제와 같은 방식이다.

중진공은 위원회가 구성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0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3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 초 기관 사업 전반의 규제요인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개선 대상 규제요인 판단기준을 7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환경규제 ▲차별규제 ▲기준규제 ▲갑을규제 ▲비용규제 ▲문서규제 ▲기타규제 등이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무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Emons

CJ대한통운, 폐플라스틱 파レット 추가 제작

에몬스, 새 CI 공개

에몬스가 회사의 얼굴인 CI(Corporate Identity)를 바꾸는 등 리브랜딩에 나섰다. 이를 통해 단순 가구 판매에서 벗어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공간 제안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에몬스에 따르면 ‘요즘 감성, 요즘 공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트렌디함을 강조한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정립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43년간 쌓인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고객의 감성을 섬세하게 읽어내며 공간에서의 삶의 가치를 제시하는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인도네시아 물류 현장에 도입

CJ대한통운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파렛트를 2차 출고하며 친환경 재생 파렛트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 파렛트와 비교해 성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도 비슷한 수준으로 양질의 폐플라스틱만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일반 플라스틱 파렛트를 대체할 수 있어 주목된다.

CJ대한통운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탄소ZERO 파렛트’ 400개를 추가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5월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제작한 탄소ZERO 파렛트 300개를 자사 물류센터에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2차 출고한 친환경



CJ대한통운 직원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폐플라스틱을 선보이고 있다. /CJ대한통운

재생 파렛트 400개는 추후 CJ대한통운 인도네시아 소재 물류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ZERO 파렛트는 락앤락의 자투리 플라스틱을 재료로 파렛트 제작 업체 ‘상진ARP’의 그린 신기술이 합쳐져 탄생했다.

/김승호 기자

어린이 경제교육 돕는 ‘아이부자카드’ 출시

교원그룹, 하나은행와 맞손

교원그룹이 어린이들의 건전한 소비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하나은행과 손잡고 ‘아이부자카드’를 출시한다.

이는 지난 3월 하나은행과 체결한 키즈 금융 교육 및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일환의 첫 프로젝트다.

17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구몬학습’과 ‘아이캔두’는 아이 스스로 경제관념을 키우고 용돈 관리를 통해 건전한 소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이부자카드를 제작했다.

아이부자카드는 아이부자앱에서 모은 용돈을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다. 부모와 약속한 독서, 심부름, 집안일 돕기 등의 활동을 완료한 후 인증샷을 찍어 부모에게 전송하면 용돈을 받아 계획성 있는 소비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교원그룹은 아이부자카드를 통해 경제관념 형성 외에도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학습 목표량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보상으로 용돈을 지급받아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